

초저출산은 지속될 것인가?

정성호*

초저출산에 관한 논의는 장래 인구추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초저출산 추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가능하다. 첫째, 초저출산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가 혹은 가까운 장래에 사라질 일시적인 현상인가 하는 질문이다. 둘째, 현재의 초저출산은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렀는지 혹은 앞으로도 더욱 감소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이다. 셋째, 초저출산 현상은 세계적으로 널리 확산되고 있는지 혹은 남부 및 동부 유럽과 같은 지역에 한정되어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이러한 질문들과 연계된 이슈들은 장래의 인구학적 연구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앞에서 제기한 질문들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초저출산 추세는 일시적인 추세가 아니라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혼인연령과 출산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 역시 초저출산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한다. 둘째, 초저출산의 수준에 관한 것으로 앞으로 출산수준이 더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최근 초저출산을 가져온 다양한 요인들이 개선되지 않거나 초저출산 추이를 막기 위한 정책이 미흡하면 현재보다 더 낮은 출산 수준이 나타날 가능성은 높기 때문이다. 셋째, 유럽의 경우와 다르게 한국, 타이완, 홍콩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초저출산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높은 교육비 부담과 육아부담을 줄이는 정책적 고려 없이 출산율이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난망하다는 지적에 주목해야 한다.

핵심단어: 경제활동참여, 혼인연령,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양육비, 교육비

I. 저출산에서 초저출산으로

지난 30년 동안 출산율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소했다. 그리고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은 대체수준 이하의 출산력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1.5 혹은 그 이하의 출산력 수준을 보이는 국가의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 강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shc@kangwon.ac.kr

<표 1> 저출산 국가의 출산력 추이(1984-2007)

국 가	최저 TFR		2007 TFR		TFR < 1.30
	연도	TFR1	TFR2	TFR2-TFR1	기간
남부유럽					
그리스	2001	1.25	1.41	0.16	8
이탈리아	1995	1.19	1.34	0.15	12
스페인	1998	1.16	1.39	0.23	10
서유럽					
독일	1994	1.24	1.37	0.13	4
동독	1994	0.77	1.37	0.60	13
서독	1985	1.28	1.38	0.10	2
중부유럽					
체코	1999	1.13	1.44	0.30	11
헝가리	2003	1.27	1.32	0.04	3
폴란드	2003	1.22	1.31	0.08	5
슬로바키아	2002	1.19	1.25	0.06	8
슬로베니아	2003	1.20	1.38	0.18	11
동부 및 남동유럽, 구소련					
불가리아	1997	1.09	1.42	0.33	10
루마니아	2002	1.25	1.30	0.04	6
에스토니아	1998	1.21	1.63	0.42	3
라트비아	1998	1.10	1.42	0.32	10
리투아니아	2002	1.24	1.35	0.12	5
벨라루스	2004	1.20	1.37	0.17	9
몰도바	2002	1.21	1.22	0.01	7
러시아	1999	1.16	1.41	0.25	10
우크라이나	2001	1.08	1.33	0.25	10
아르메니아	2000	1.11	1.42	0.31	4
동아시아					
홍콩	2003	0.90	1.02	0.12	16
일본	2005	1.26	1.34	0.08	3
한국	2005	1.08	1.26	0.18	6
싱가포르	2005	1.08	1.29	0.03	5
타이완	2007	1.09	1.09	0.00	5
기타(TFR < 1.4)					
오스트리아	2001	1.33	1.38	0.05	-
크로아티아	2003	1.33	1.38(2006)	0.05	-
쿠바	2006	1.39	1.43	0.04	-
덴마크	1983	1.38	1.85	0.47	-
그루지아	2005	1.39	1.45	0.06	-
포르투갈	2007	1.33	-	-	-
스위스	2001	1.38	1.45	0.07	-

자료: Goldstein(2009)

저출산의 확산과 함께 합계출산율 1.3 이하를 의미하는 초저출산 현상도 크게 주목받고 있다. 초저출산은 남부 및 중동부 유럽 국가들에서 나타났으며, 가장 먼저 초저출산 국가에 도달한 국가는 스페인(1992)과 이탈리아(1993)였다. 이어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라트비아 등이 1995년,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등은 1999년에 이르러 초저출산 국가의 대열에 합류했다. 초저출산 현상은 유럽 뿐만 아니라 홍콩,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초저출산 현상은 인구학자는 물론 저널리스트와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초저출산의 지속은 인구구조의 측면에서 인구의 고령화를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인구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측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구의 급격하고 지속적인 감소로 서구 문명이 몰락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은 좋은 예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력 수준을 보이는 미국에서도 저출산은 경제적 번영의 상실과 인구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경고가 주목을 끌기도 하였다. 초저출산 현상을 규명하기 연구도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예컨대 Bongaarts(2002)의 출산력 변천에 관한 연구, Kohler, Billari, Ortega(2002)의 초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연구, 그리고 일단 떨어진 출산력은 자기강화 과정을 통해 지속된다는 Lutz(2006)의 '저출산 올가미 가설' 등은 좋은 예이다. 이러한 연구들을 기반으로 몇몇 예측가들은 당분간 저출산 및 초저출산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적어도 2050년 전까지는 합계출산율이 1.3 이하 수준으로 고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Kaneko et al., 2008). 이와 비슷하게 홍콩도 2016년 까지 합계출산율이 0.9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 및 유럽 국가들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저출산 및 초저출산 현상은 출산력이 대체수준에 이르러 안정적인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종래의 인구학적 전망과 큰 차이를 보인다. 사실 출산력에 대한 미래 예측은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큰 변화를 보였다. 예를 들어 1998년 UN은 모든 국가가 합계출산율 2.1로 수렴할 것이라는 종래의 가정을 포기하고 이후 수정하여 1.85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나 이 전망 역시 저출산이 확산됨에 따라 새롭게 수정되어야 할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한편 초저출산 추세는 일시적이며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Goldstein(2009)의 연구에 따르면 그 동안 합계출산율 1.3 이하를 보이던 국가들의 출산력이 더 이상 낮아지고 않고 오히려 상승하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초저출산을 경험한 이후에는 어느 정도 출산력을 회복하고 있다. 예

컨대 스페인의 경우 가장 낮은 출산력 수준을 보였던 1998년의 1.16에 비해 2007년에는 1.39에 이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러시아 역시 1999년 1.16에서 2007년 1.41로 0.25 상승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패턴은 동아시아 국가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5년 1.26으로 최저 출산율을 보인 이후 2007년에는 1.34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홍콩, 싱가포르 등도 상승 추세를 보였다. 한국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즉 2005년 1.08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던 합계출산율은 2007년 1.26으로 0.18만큼 증가했다.

그러나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출산율 회복이 지속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다. 일본의 경우 2007년 1.34였던 합계출산율은 2008년 1.26으로 다시 낮아졌으며, 싱가포르도 2007년 1.29에서 2008년 1.26으로 다시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홍콩 역시 여전히 낮은 수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으며, 타이완도 2008년 1.0으로 다시 낮아졌다. 이와 비슷하게 한국도 2007년 1.26였던 합계출산율은 2008년 1.19, 2009년 1.15로 출산율이 다시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초저출산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초저출산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유럽의 초저출산 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출산력 회복이 동아시아 국가에서도 나타날 것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우선 한국사회에서 지속되고 있는 초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 경제불황,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 그리고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경제불황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가 저출산의 일반적인 원인이라면 지나치게 높은 교육열 및 교육비 부담은 동아시아 및 한국에서 지속되고 있는 초저출산의 특수한 원인으로 보기 때문이다.

II. 초저출산에 대한 전망

초저출산에 관한 논의는 초저출산의 장래 추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물론 앞으로 초저출산이 멈출 것인지, 출산율이 회복될 것인지 혹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쉽게 답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최근의 연구에서 Lutz(2006)은 장래에 출산율이 증가할 것인지 혹은 감소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한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초저출산 추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가능하다. 첫째, 초저출산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가 혹은 가까운 장래에 사라질 일시적인 현상인가 하는 질문이다. 둘째, 현재의 초저출산은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렀는지 혹은 앞으로도 더욱 감소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이다. 셋째, 초저출산 현상은 세계적으로 널리 확산되고 있는지 혹은 남부 및 동부 유럽과 같은 지역에 한정되어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쉽지 않지만 이 질문들과 연계된 이슈들은 장래의 인구학적 연구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Kohler(2001)는 초저출산은 머지않아 사라질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유럽의 자료를 바탕으로 평균 출산연령과 출산의도 등에 관한 검토를 통해 Kohler는 출산연기가 가까운 미래에 멈출 것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첫 번째 아이를 출산하는 평균연령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장래의 출산 수준은 출산연기가 지속됨에 따라 대체출산 이하의 출산수준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중남부 유럽의 경우 상당기간 동안 합계출산율 1.3이하의 출산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초저출산 현상은 현재 합계출산율이 1.3에서 1.5사이에 있는 다른 지역의 국가들까지 가까운 장래에 확산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러한 국가들의 후보로는 오스트리아, 독일, 여러 중부 및 동부유럽 국가들(폴란드,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등)과 아시아의 일본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전망과 비슷하게 최근 산업국들이 보여주고 있는 저출산 기조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는 Eurostat(2005)는 EU 25개국을 대상으로 한 인구예측에서 UN의 중위치보다 훨씬 낮은 출산력 수준을 추정했다.

초저출산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은 장래인구추정에서도 잘 드러난다. 예컨대 일본의 공식적인 인구추계에서 출산율이 회복될 것이라는 예측이 빛나가게 되자 2006년 발간된 일본의 장래인구추계에서는 '중위 추계'의 경우 합계출산율이 적어도 2055년까지 1.3 이하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하였다. '저위 추계'의 경우 이 전망은 합계출산율이 1.1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한다. 독일의 경우도 '저위 추계'의 경우 합계출산율이 1.2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중위 추계'의 경우에도 출산율이 1.4 정도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한다. UN의 2008년 세계인구추계는 일본과 독일의 경우보다 훨씬 낮은 출산율을 전망하였다. 즉 '저위 추계'의 경우 합계출산율은 더욱 떨어져 동유럽과 동아시아의 합계출산율이 1.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이 추계는 2020-2025년 사이 벨라루스의 경우 합계출산율이 0.86에 이르고, 홍콩의 경우는 0.61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코흐트

출산력 역시 1.3 혹은 그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예를 들어 1975년에 태어난 여성의 출산력이 이탈리아 1.2,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1.2-1.3, 그리고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에서 1.3-1.4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Frejka and Sardon, 2004).

초저출산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초저출산은 일시적인 현상이며, 최근 점차 출산율이 회복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주장은 전쟁과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초저출산은 최근에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점차 회복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초저출산이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1984-85년 서독으로 당시 합계출산율이 1.3 이하로 떨어졌다(〈표 1〉 참고). 비슷한 시기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합계출산율이 1.5 이하로 떨어졌으며, 이후 10년 동안 여러 유럽 국가들과 동아시아의 국가들까지 초저출산 기조는 광범위하게 퍼져나갔다. 인구가 1백만 명 이하를 가지고 있거나 인구통계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몇몇 국가들을 제외할 경우 초저출산 국가는 1991-92년 사이의 2개국에서 2003년에 이르면 21개국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초저출산 국가에 거주하는 인구도 4억 7천 9백만 명에 이르렀으며, 유럽의 경우 전 유럽 인구의 절반 이상이 초저출산 국가에 거주하였다. 그러나 2003년을 고비로 초저출산 기조는 점차 약화되어 2007년에는 유럽의 경우 몰도바(1.22), 루마니아(1.30)만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되었다. 비록 동아시아 국가들 중 일본만이 2007년 합계출산율이 1.34로 회복되었을 뿐 홍콩, 싱가포르, 한국, 타이완 등은 여전히 초저출산 기조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초저출산 국가에 거주하는 인구는 2003년 이후 1억 1천 4백만 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유럽의 경우는 이 중 3천 1백만 명 만이 거주하여 출산율이 회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7년 현재 합계출산율이 1.4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으며, 이보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국가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이전의 사회주의권이었던 유럽의 5개국과 아르메니아는 합계출산율이 0.3이 증가하였으며, 동독에서는 2007년 0.6이 증가한 1.37에 이르렀다. 에스토니아 역시 0.42가 증가한 1.63에 이르렀으며, 이 수준의 유럽 전체의 평균 합계출산율 1.49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예들은 초저출산 추세가 지속되기보다는 출산율이 점차 회복되어 저출산 수준 약 1.5 내외에 머무를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미있는 사실은 최근의 출산수준 회복이 단지 그 동안 초저출산 추세를 보였던 국가에 한정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기존에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 수준을 보였던 국가들이 초저출산 국가들이 경우보다 출산력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등은 가장 낮

은 출산수준을 보였던 시기보다 0.25에서 0.35까지 출산력이 상승하였다.

Goldstein(2009)은 이러한 출산력의 회복 혹은 상승을 1) 출산연기와 합계출산율을 낮추는 시기영향(tempo effect)의 감소 혹은 정지, 2) 출산 추세에 영향을 미치는 이민자들의 높은 출산력 수준, 3) 경제적 환경의 개선과 실업의 감소, 4) 구체적인 출산촉진 및 가족연계 정책들의 영향 등의 원인에서 찾고 있다¹⁾. 이러한 검토를 기초로 Goldstein은 초저출산 기조가 거의 끝나가고 있음을 조심스럽게 밝히고 있다. 유럽의 경우 2007년 현재 초저출산을 보이는 국가는 거의 없으며, 다만 동아시아 국가는 아직도 합계출산율 1.3 이하를 보이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최저를 보이던 시기와 2007년을 비교하면 출산수준이 약간 증가한 국가 (몰도바 0.01, 싱가포르 0.04, 루마니아 및 헝가리 0.04) 등과 출산수준이 두드러지게 증가한 국가 (동독 0.60, 에스토니아 0.42, 불가리아, 체코 및 라트비아 0.30-0.33) 등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7년 현재 그 동안 초저출산 수준을 보였던 국가들의 합계출산율 수준은 1.4로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

Goldstein는 초저출산의 시기는 12년을 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예로써 에스토니아, 헝가리, 일본의 경우 초저출산 수준이 1.3 이하에 머무른 시기가 불과 3년에 이르고 있으며, 보다 전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10년 동안 초저출산에 머무른 경우는 이탈리아, 스페인, 체코, 슬로베니아, 불가리아, 라트비아 등이 있다. 예외적인 것으로 홍콩은 초저출산 수준이 16년을 넘고 있다.

물론 Goldstein의 연구는 출산수준이 다시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출산력 회복이 일어나지 않은 타이완 같은 국가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했던 경제위기로 인해 이전의 초저출산 국가의 출산력이 다시 떨어지는 예에서 들어나듯이 초저출산 국가로 다시 진입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Goldstein은 이러한 초저출산 추세는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시기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경제위기에 따른 출산연기가 그리 오래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경제위기 상황은 초저출산을 가져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출산촉진정책도 비록 그 정책의 효과를 양적으로 나타내기는 힘들지만 출산율 회복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사실 초저출산 추세가 지속된 국가에서는 현재의 출산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을 인식하여 다양한

1) 그러나 Goldstein은 출산력 회복을 위해서 그 동안 많이 제시되었던 방안들 즉 가치관의 변화와 문화적인 측면, 양성평등의 실현 및 가사노동의 분업 실현 등을 분석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정책을 수행해 왔다. 그 결과 몇몇 국가에서는 최근의 출산력 증가가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에 따른 결과라고 해석되기도 하며, 이와 달리 출산력의 변화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구체적인 혜택이 주어질 때만 약간 나타나는 것이라고 주장되기도 한다.

초저출산 추세가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동의할 하던 하지 않던 출산추세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최근 여러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출산력이 경제 상황에 따라 큰 변화를 보이는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출산력과 경제상황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경제상황이 어려울 때 출산을 연기하는지 혹은 아예 출산을 포기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출산촉진 정책이 얼마나 출산력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포함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도 출산력의 저하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보육시설이 부족한 현실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는 출산력 저하와 밀접하게 연관될 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지니기 때문이다. 초저출산과 교육비 부담의 관계 역시 보다 많은 관심을 필요로 한다. 오늘날 한국, 일본,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지속되고 있는 초저출산 현상은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이다.

Ⅲ. 한국의 초저출산 추이와 원인

1. 초저출산 추이

앞의 <표 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일본,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 한국 등 동아시아 5개국의 초저출산 추세는 유럽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유럽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초저출산 추세가 끝나고 출산력이 점차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동아시아 국가들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초저출산 추세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들이 지니고 있는 사회문화적 특수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자녀에 대한 가치관, 자녀에 대한 교육문제 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이 국가들이 문화적으로 전통적이고 남성 중심의 가족체계를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한국의 초저출산 추이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검토될 수 있다.

한국은 1983년 합계출산율이 대체수준인 2.1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선진국 수준의

<표 2> 합계출산율 추이 : 1980-2009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출산율	2.83	1.67	1.59	1.65	1.47	1.08	1.12	1.25	1.19	1.15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해당연도.

저출산 단계에 진입하였고,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09년 현재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 수준인 1.15를 보이고 있다. 2008년 출생통계 결과에 따르면 전년에 비해 30대 후반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출생아수가 감소하였으며, 특히 20대에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20대의 경우 26.2만 명에서 24.2만 명으로 2만 명이 감소하여 전체 감소분의 81.5%를 차지하였으며, 30대의 경우는 26.4만 명에서 25.9만 명으로 5천 명이 감소하여 전체 감소분의 18.5%를 차지하고 있다. 출산 순위별로는 첫째아의 감소가 출생감소의 74.1%를 차지하였으며, 둘째아 이상은 25.9%를 차지하였다.

2005년 합계출산율 1.08로 가장 낮은 출산수준을 보였던 한국은 2006년과 2007년 각각 결혼하면 길하다는 쌍춘년과 그 해 태어난 아이는 부자가 된다는 ‘황금 돼지해’의 영향으로 출산력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08년 1.19로 다시 낮아졌다²⁾. 물론 ‘출산력 쇼크’라는 평가를 받았던 2005년에 비해서는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으나 절대적인 출산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은 30.8세로 2007년의 30.6세보다 0.2세 상승했으며, 10년 전인 1998년에 비교하면 28.5세에서 2.3세 상승한 것이다.

오늘날 한국의 합계출산율 1.15는 현재의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합계출산율(2.1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수치이다. 이 같은 합계출산율은 유엔인구기금 기준 세계 평균인 2.6명과 선진국 평균인 1.57명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홍콩(1.02명)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초저출산 추이가 계속되면 한국의 인구는 2020년 4,995만 6천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며, 2017년부터 노령인구 비중이 유년인구 비중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초저출산에 관한 기존연구

한국에서 저출산이 문제가 되고 관심을 끈 2000년대 초반 이후 한국의 저출산 및 초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서구에서 개

2) 2005년에 비해 출생아 수도 각각 3.0%, 10.0% 증가했다.

발된 저출산 이론의 틀을 활용하여 측정 가능한 변수와 출산력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와 함께 한국의 특수한 사회경제적 상황 즉,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양성평등 등의 시각에서 저출산을 분석하려는 시도가 주를 이루었다.

한국의 저출산 및 초저출산을 설명하기 위한 연구들은 대부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가족형성 등 3가지 원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 중 제2차 출산력변천의 개념을 도입한 김두섭(2005)의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이 연구는 1980년 대 중반 이후의 출산력 저하는 경기 후퇴에 따른 불안정한 노동시장, 가족형성의 지연과 약화, 양성평등 관념의 확산 등의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경기불황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혼인과 첫 출산의 시기를 연기하거나 자녀 간 출산 터울을 넓히도록 만들었으며, 이는 한국이 최근 초저출산 수준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기불황과 높은 실업률이 출산력 저하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연구결과에서 잘 드러난다³⁾. 둘째, 가족형성의 지연과 약화는 결혼의 지연, 유배유자 비율의 감소와 이혼의 증가 등을 의미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장래에 대해 불안하게 생각하게 되고, 그 결과는 결혼과 첫 출산 시기의 지연으로 나타난다. 유배유자 비율의 감소와 이혼의 증가는 자기중심적 삶을 지향하는 젊은이들의 가치관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출산력 저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개인의 자아실현 욕구, 전통적 권위로부터의 자유, 개인적 취향의 충족과 같은 가치관이나 태도에 의해서 출산력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과 고용 부분에서 여성차별의 감소와 자녀양육에 대한 여권 확대는 한국의 출산력 저하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을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⁴⁾.

앞의 논의를 기초로 지역별 차별출산력을 분석하고 있는 유삼현(2006)의 연구 역시 양성평등의 관념,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가족형성 등을 저출산 인과구조의 결정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분석결과 양성평등 관념과 노동시장 불안정성은 가족형성과 출산력을 낮추는 부(-)적 관계를, 가족형성은 출산력을 높이는 정(+)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성평등 관념과 노동시장 불안정성은 가족형성을 매개로 출산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출산력 저하

3) 경제위기와 저출산 문제는 이성용(2006)과 김두섭(2007)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4) 성 평등성과 둘째 출산과의 관계를 밝힌 박수미(2008)의 연구도 성 평등 의식의 확산이 저출산 현상에서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혼취업 여성의 경우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이 연구는 가족 내 성 평등성 여부가 둘째 출산 계획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양성 평등의 실현이 한국사회의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두 연구는 모두 한국 사회의 저출산 구조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가족형성의 지연과 약화, 양성평등 관념의 확산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저출산을 가져온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중 결혼율의 감소, 초혼 연령의 상승, 이혼율의 상승, 소자녀 가치관 등 가족형성과 관련된 변수들은 저출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볼 수 있다.

가족형성의 지연과 약화는 무엇보다도 젊은이들의 가치관 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예컨대 남녀를 불문하고 20대에게 있어 결혼은 더 이상 중요한 개인과업이 아니며, 결혼과 출산 또한 순차적이며 연속적인 생애 과업으로 수용되지 않음은 물론 혼인과 자녀 출산에 있어 사회적인 적령기의 개념조차 퇴색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곧 혼인율과 출산율의 감소, 평균초혼연령의 지속적인 증가와 미혼인구의 증가라는 집합적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김혜영, 2008)⁵⁾.

저출산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도 한국의 저출산 현상을 밝히는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예컨대 저출산의 원인을 경제학적인 이론적 틀을 이용하여 거시적으로 분석한 오유진 외(2008)은 여성의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경제활동 비율이 높아지고 또한 남성대비 여성의 임금 폭이 줄어드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여건이 좋아짐에 따라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출산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이 연구는 청년 실업률로 대변할 수 있는 청년층의 불안정한 고용여건이 결혼을 연기하거나 출산 중단 및 포기 등으로 이어져 저출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초저출산의 메커니즘(1) : 혼인의 지연 혹은 회피

일반적으로 저출산에서 초저출산으로의 하강은 혼인 연령의 상승으로 인한 출산연기와 무자녀의 증가로 설명된다. 이 경우 개인이 출산을 연기하고 자녀를 갖지 않게 하는 사회적 기제는 여성의 경제적 독립과 개인주의 이데올로기

5) 한편 가족형성의 지연과 약화는 1990년대 후반에 다가온 IMF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확산에 의해 더욱 가속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실상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자유와 개인의 이윤추구에 기반 한 개별노동자 모델의 도입을 요구함으로써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male breadwinner model)을 해체하며, 이는 결국 여성의 가족제도의 약화 혹은 해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과 청년실업 증가로 인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은 청년세대의 가족구성을 지연시키는 중요한 환경으로 작용하게 된다(김혜영, 2008).

확산, 그리고 경제적 불안정 등을 들 수 있다(이성용, 2009). 이와 같은 설명은 초저출산을 미리 경험한 유럽에서 잘 드러난다. 한국에서의 초저출산 역시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즉 2000년대에 들어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한국의 초저출산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증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및 가족형성의 지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은 현재 및 미래의 경제적 불안의 증가를 의미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증가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경제위기로 인해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어지면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도 증가하여 초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의 글로벌화와 이에 따른 경쟁의 격화는 고용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평균 근속년수는 증가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선진국에 비해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짧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또 다른 지표인 직장유지율 역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고용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은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잘 드러난다.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크게 증가한 비정규직은 2009년 3월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의 33.4%에 이르고 있으며, 실제 비율은 더 높다는 견해도 있다.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에 비해 비교적 쉽게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불안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잘 나타내는 청년실업의 증가는 결혼연기 혹은 결혼 포기와 밀접한 관계를 보이면서 저출산을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실업이란 일을 할 수 있고, 일을 할 의사가 있는 15-29세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일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⁶⁾. 청년실업률은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청년실업률은 1980년 이래로 약간 감소하다가 2000년에 10.5%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외환위기 시기였던 1998년 16.1%, 1999년 14.8%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후 청년실업률은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8년 현재 8.0%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청년실업률은

6) 통계청이 사용하는 청년실업률 산정 기준은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른 것이다. 이에 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5-24세 중 지난 한 달간 구직활동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은 군복무가 의무화돼 있는 점을 고려해 청년실업 범위를 15~29세로 넓게 잡은 ILO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OECD 기준이 보다 엄격하기 때문에 OECD 기준으로 할 경우 실업률은 높아진다.

<표 3> 사회경제지표와 초혼연령 : 1980-2008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8
청년실업률(%) ¹⁾	15 - 19세	13.3	11.1	9.2	7.9	13.8	11.6	9.3
	20 - 29세	8.1	7.1	4.9	4.3	7.1	7.4	6.7
	평균	10.7	9.1	7.1	6.1	10.5	9.5	8.0
경제활동참여율(%) ¹⁾	15 - 19세	34.4	21.1	18.7	14.5	12.6	10.3	7.5
	20 - 24세	53.5	55.1	64.6	66.1	61.2	62.6	54.6
	25 - 28세	32.0	35.9	42.6	47.9	55.9	66.1	69.3
	평균	40.0	37.4	42.0	42.8	43.2	46.3	43.8
초혼연령(세) ²⁾	여 성	23.2	24.5	24.8	25.3	26.5	27.7	28.3
	남 성	26.4	27.7	27.8	28.4	29.3	30.9	31.4
	평균	24.8	26.1	26.3	26.9	27.9	29.3	29.9

자료: 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해당연도
 2)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해당연도

평균 실업률 3.7%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며, 30대 3.7%, 40-50대 2.5%와 비교하면 높은 편이다.

최근 통계청 보고서(2009)에 따르면 청년층 인구(15-29세)의 고용 비율이 가파른 하락세를 거듭하는 등 청년실업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인구는 982만 1천 명으로 2008년에 비해 4만 2천 명이 줄었지만 취업자도 415만 4천 명으로 6만 8천 명이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청년층의 고용률도 42.3%로 전년의 42.8%에 비해 0.5% 하락했고 실업률은 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전체 고용률이 60.5%에 달하고 실업률이 3.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청년층의 고용이 상대적으로 불안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출산력 연구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주요한 변수로 다루어져 왔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로 인한 초혼연령과 출산연령 상승 및 자녀의 기회비용 증가로 출산율이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여성의 취업으로 인한 임금의 가족의 소득을 높이는 요인이 되며, 가족과 일이 분리된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취업은 자녀양육에 드는 시간의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 즉 자녀와 관련한 노동은 시간을 요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여성은 취업과 자녀양육을 양립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자녀의 출산과 여성의 노동력 참여는 부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정혜은 외, 2008). 한국의 경우에도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과 출산율의 관계는 지난 1970년 이래로 매우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예컨대

1970년 20-39세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38.2%였으나 2005년 58.6%로 20% 이상 상승한 반면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2005년 1.08명으로 급속하게 하락하였다(류덕현, 2008).

〈표 3〉에 나타나 있는바와 같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1980년대 이래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20-24세 여성의 경우 1980년 53.5%, 1990년 64.6%, 2000년 61.2%로 약간의 증가추이를 보이다가 2007년 56.4%, 2008년 54.6%로 약간 감소하고 있다. 이에 반해 25-29세 연령층에서는 1980년 32.0%, 1990년 42.6%, 2000년 55.9%, 2008년 69.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는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권익이 신장됨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여성의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어느 경우든 미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여성은 직장, 양육, 가사 등의 병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미혼 여성의 경우 결혼 연령이 높아지는 원인으로 작용하며, 기혼 여성의 경우 직장과 가사 중 택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특히 '출산=퇴사'의 공식이 적용되는 기업이 많은 현실 속에서 한국의 여성들은 출산에 따른 사회적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출산을 뒤로 늦추거나 아예 출산 자체를 기피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가족형성의 시기와 정도, 그리고 그것의 해체는 출산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혼외출산이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한국사회에서 출산력에 대한 가족형성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여기서 가족형성은 혼인의 일반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결혼의 지연 및 미혼, 그리고 이혼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결혼이 출산을 규제한다는 점에서 볼 때 출산력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의 하나로 혼인연령을 들 수 있다. 혼인연령은 출산가능 기간을 결정해주기 때문에 여성의 혼인연령에 따라 출산력 수준은 크게 좌우된다. 혼인연령은 직간접으로 출산수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혼인연령이 낮아질수록 혼인한 후 여성의 가임기간이 길어지게 되므로 더 많은 자녀가 출생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된다. 결혼의 안정성 역시 출산력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이다. 즉 결혼 후 부부가 얼마나 오래 함께 살고 있느냐에 따라 출산력은 차이가 난다. 결혼은 이혼과 별거, 사별에 의해 와해되며, 이들은 출산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이희연, 2003).

〈표 3〉은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이 1980년 23.2세에서 1990년 24.8세, 2000년 26.5세, 2008년 28.3세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남성의 평균

초혼연령도 1980년 26.4세, 1990년 27.8세, 2000년 29.3세, 2008년 31.4세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1980년에 비해 남녀 모두 5세 이상이 증가했으며, 2008년 현재 여성과 남성의 초혼연령을 평균한 수치는 29.9세 이르고 있다. 이러한 증가 추세에 끝점이 어디이며, 혹은 초혼연령이 상승에서 감소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한국의 출산을 추이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초혼연령의 증가는 미혼율의 증가에서도 잘 드러난다. 예를 들어 30-34세 여성 중 미혼의 비율은 2000년 10.5%에서 2005년 19.0%로 증가했다. 35-39세 여성의 미혼 비율도 같은 기간 동안 4.1%에서 7.6%로, 25-29세는 39.7%에서 59.1%로 각각 증가했다. 이처럼 출산 연령대에 있는 여성이 결혼을 하지 않아 출산율이 낮아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며, 미혼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경우 기혼 여성의 출산을 조절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통계개발원, 2009).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년층의 불안정한 고용여건은 결혼을 연기하거나 출산 중단 및 포기 등으로 이어져 저출산 및 초저출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비율이 높아지면 결혼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보육 및 육아 복지가 잘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자녀의 육아 및 교육에 대해 여성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과 일하는 어머니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가 사회에 널리 퍼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는 출산을 저하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할 수 있다.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을 중시하고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 독신을 택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⁷⁾.

4. 초저출산의 메커니즘(2) : ‘개인의 선택’보다는 ‘현실적 장애요인’

한국의 초저출산은 한국 사회의 독특한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유럽의 저출산 국가와 달리 한국에서의 저출산 및 초저출산은 날로 치열해지는 입시 경쟁으로 인한 과도한 교육비 지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는 자녀교육비 특히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녀를 갖지 않거나 추가적으로 자녀를 갖지 않으려는 생각이 확산되는 것을 의

7) 이와 비슷하게 미혼의 비율도 급격하게 증가했다. 예를 들어 25-29세 여성 중 미혼의 비율은 1980년 14.1%에서 2000년 39.7%, 2005년 59.1%로 각각 증가했다. 30-34세 여성 중 미혼 비율도 같은 기간 2.7%에서 10.5%, 19.0%로 증가했다.

미하는 것으로 한국사회의 초저출산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변수로 볼 수 있다⁸⁾.

우리나라 근로자 가계는 자녀 교육에 총 소비지출의 12%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3.4%의 주거비 비중과 4.9%의 보건의료비 비중을 넘어서는 엄청난 수준이다. 한국 가계의 교육비 지출은 지난 198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해 외환위기를 비롯한 국가적인 위기에도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의 부담은 가계를 더 괴롭히고 있다(홍춘욱, 2009).

오늘날 한국은 공교육비 민간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다⁹⁾.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6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3%로 조사대상 36개국의 평균인 5.8%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민간부담률은 2.9%로 OECD 평균(0.8%)의 3배를 웃돌며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정부부담률(교육예산 등 학교교육에 대한 정부의 공적 지원 금액)은 4.5%로 OECD 평균(4.9%)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반해 유럽국가들의 공교육비 민간부담률은 핀란드 0.1%, 이탈리아 0.3%, 프랑스 0.4%, 독일·영국 0.7% 등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4〉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2006)

국 가	민간부담	정부부담	계
한국	2.9	4.5	7.3
미국	2.4	5.0	7.4
캐나다	1.7	4.8	6.5
영국	0.7	5.2	5.9
프랑스	0.4	5.5	5.9
일본	1.7	3.3	5.0
핀란드	0.1	5.7	5.8
이탈리아	0.3	4.6	4.9
독일	0.7	4.1	4.8
OECD 평균	0.8	4.9	5.8

8) 같은 맥락에서 한국, 일본, 대만, 홍콩 등의 동아시아 국가가 모두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수준을 보이는 공통적 요인이 교육비 부담이 높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교육비 부담은 높은 교육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일부 교육학자들은 일본, 타이완 등에서 높은 교육열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유교문화와 높은 교육열 간의 상관성을 강조한다.

9) 공교육비 민간부담률이란 학생이나 학부모가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의 교육비 중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급식비, 기숙사비 등 학교생활을 위해 지출하는 돈의 규모를 의미한다. 민간부담률이 높다는 것은 수업료, 각종 수익자 부담경비 등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공교육비가 많음을 의미하며, 민간부담률이 높을수록 교육복지 수준은 낙후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공교육비 중 민간부담률이 높은 상황과 함께 치열한 입시경쟁이 일상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사교육비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수준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다. 지난 200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사교육비가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9%였으며, 이 비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중이며, OECD 평균보다 무려 4배나 높은 수준이다. 또한 공교육을 포함한 전체 교육비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40%로 OECD 평균의 3배나 되었다. 이 비중은 8%에 그친 아이슬란드의 무려 5배에 이르는 높은 수준이다. 특히 대학교육비의 경우 학생들이 학비로 내는 자기부담액이 국가지원금의 3.7 배로 학비가 비싸다는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도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2009년 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9년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사교육비 총액은 21조 6천원으로 2008년 대비 3.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3.9%가 증가하였다. 사교육 참여율은 2007년 77.0%, 2008년 75.1%, 2009년 75.0%에 이르고 있어 매우 높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권역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은 서울, 중소도시, 읍면지역 순으로 나타나 사교육비와 지역별 출산력 차이가 연관되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¹⁰⁾. 이러한 설명은 서울, 부산, 대구를 중심으로 한 대도시와 수도권 출산율이 다른 지역의 출산율보다 낮게 나타나는 조사결과에서도 잘 드러난다. 예를 들어 2007년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의 합계출산율이 각각 1.06, 1.02, 1.13, 1.25인데 반해 전남, 충남, 제주의 합계출산율은 각각 1.53, 1.50, 1.48로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차별출산력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미혼율 등 다양한 원인으로 설명될 수 있으나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대도시 지역에서 출산율이 낮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과도한 양육비용 및 교육비가 한국의 초저출산을 가져왔다는 해석은 출산력 관련 설문조사에서 잘 드러난다. 출산율 감소에 대한 가장 흔한 대답은 “교육비가 너무 높다”와 “교육 이외의 자녀양육비용이 너무 높다”이다. 이와 비슷하게 “자녀양육과 교육비”가 가사비 지출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된다. 예를 들어 2009년 매일경제신문이 실시한 출산 관련 의식조사에서 응답대상 기혼자 중 아이를 더 낳지 않는 이유를 무든 질문에 ‘육아비용’ 때문이라는 답이 47%를 차지했으며, ‘사교육비 부담 때문’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31%나 됐다. 동일한 조사에서 “각종 비용 부담 때문에 아이 낳은 것을 후회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

10) 2009년 권역별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 33.1만원, 광역시 22.5만원, 중소도시 24.5만원, 읍면지역 15.6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 50%에 이르렀다. 이에 반해 “출산이나 육아 때문에 심신이 지쳐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24%, “아이들 때문에 나 혼자만의 시간이 없어진 것이 후회스럽다”는 응답한 비율은 10%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저출산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로 이해될 수 있다. 한국 사회가 아이를 낳아 기르는 데 돈을 너무 많이 필요로 하는 고비용 구조이기 때문에 출산을 꺼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저출산 및 초저출산 현상이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현실적 장애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일본 내각부가 2008년 20-49살 남녀(각국 1000여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출산과 육아 실태에 대한 의식조사에서도 잘 나타난다. 즉 “아이를 낳고 키우기 쉬운 나라인가?”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생각한다’거나 ‘그런 편이라고 생각한다’는 대답이 스웨덴 98%, 미국 78%, 프랑스 68%, 일본 48%인데 반해 한국은 19%로 가장 낮게 나타나 한국인들은 출산과 육아 환경이 가장 열악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조사에서 아이를 더 낳고 싶지 않은 이유로 한국(68%)과 일본(56%) 모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높은 사교육비 부담이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출산을 고려 중인 부부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이 공감하는 대목이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시작된 사교육비 부담이 최근에는 대학생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져 대학생들마저 매년 300만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취업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생 이후 20-25년간의 사교육비를 부모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은 가정 경제에 엄청난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부에 주문하고 있는 출산 및 육아지원책도 “사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는 교육개혁”이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이고 있다.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아이를 더 낳고 싶다는 게 응답자들의 속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결과는 심층면접에서도 잘 드러난다. “하나 더 낳고 싶긴 하지만 아들 하나로 만족한다”는 A씨 부부, “결혼은 하고 싶어도 아이는 갖기 싫다는 B씨, 아들과 딸을 키우고 있지만 지원만 된다면 하나 더 낳고 싶다는 맞벌이 부부 C씨 등이 공통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데 드는 ‘비용 부담’ 이었다. A씨는 “아내는 더 나이 들기 전에 아이를 가졌으면 하는 눈치인데 내가 말리고 있다”며 “맞벌이 부부라면 몰라도 혼자 벌여 한 아이를 대학까지 보내려면 그것도 벅찬 게 현실”이라고 말하고 있다. C씨의 경우 “처음 결혼할 때만 해도 셋은 낳을 생각이었지만 요즘 남편의 소득이 워낙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한 더 낳을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있다며, 여건만 허락된다면 하나

더 낱아보고 싶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주부, 기혼여성 직장인, 남성 직장인 등 3개 그룹을 대상으로 진행된 심층면접 결과에 따르면 아이를 낱지 않는 첫 번째 이유로 든 것이 사교육비와 경제적 부담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마음 놓고 아이를 낱길 곳이 없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들은 저출산 대책에 관한 일반인들의 견해에서도 잘 드러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혼 여성이 가장 원하는 저출산 대책은 ‘자녀의 양육·교육비 지원’으로 나타나고 있다¹¹⁾. 국민의식 여론조사에서도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정책을 “영육아 보육 교육비 지원 확대”가 30.9%로 가장 높았고, “방과 후 학교 등 사교육비 경감 지원”이 23.4%로 뒤를 이었다(조선일보, 2009). 이러한 견해는 전체 생활비 가운데 자녀 교육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는 가구가 50% 이상이 될 정도로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과다한 상황에서 당연하게 보인다. 또한 자녀가 1명인 가구 가운데 자녀 교육비 비중이 가장 큰 경우는 23.8%에 머물렀으나 2명이 되면 59%, 3명 이상은 63.8%에 이르러 자녀 수 증가에 따라 교육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을 엿볼 수 있다.

IV. 맺음말

한국의 출산력은 외환위기 이후 계속 감소하다가 2005년 1.08을 최저점으로 한 후 2006년 1.13, 2007년 1.26으로 약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8년 합계출산력이 1.19로 다시 하락하는 초저출산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06년과 2007년에 약간 증가 추이를 보인 것은 해당 연도가 각각 쌍춘년과 황금돼지 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인다. 2009년 합계출산력이 다시 1.15로 하락한 것은 앞으로 한국의 초저출산 추세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낱기도 한다. 현재 한국의 초저출산 수준은 홍콩의 1.02, 타이완의 1.09 수준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초저출산 추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가능하다. 첫째, 초저출산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가 혹은 가까운 장래에 사라질 일시적인 현상인가 하는 질문이다. 둘째, 현재의 초저출산은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렀는지

11) 이 조사는 전국의 20-44세 기혼여성 3585명과 미혼남녀 33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기혼 여성이 가장 원하는 정책은 ‘양육·교육비 지원’(55.1%), ‘일·가정 양립 정책’(16.7%), ‘주거 지원’(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혹은 앞으로 더욱 감소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이다. 셋째, 유럽의 경우 초저출산 추세가 주춤하고 있는데 비해 한국, 타이완, 홍콩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초저출산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쉽지 않지만 이 질문들과 연계된 이슈들은 초저출산 연구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초저출산 추세를 가져온 원인은 다양하게 검토될 수 있으나 본 연구는 노동시장의 불안정,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혼인 연령의 상승 등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보고 있다. 시장경제의 확산과 경제위기 상황의 발생으로 인한 취업난이 지속되면서 청년실업 문제는 가족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젊은이들을 상대로 진행된 많은 조사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남성 결혼율이 비정규직 남자의 결혼 비율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청년실업과 같은 경제적 요인이 혼인기피 혹은 혼인연기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제 회복과 함께 젊은 층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기 전까지는 지금의 출산율이 갑자기 오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과 출산율을 높이려면 청년실업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는 혼인 연령의 증가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출산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는 초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여성의 사회진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 노동자의 고용 상태가 불안정하면 출산율이 증가하기 힘들다. 따라서 여성이 출산·양육을 하는 동안 경력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출산·양육으로 직장활동을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근로 여건이 가족 친화적으로 바뀌어야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는다는 지적도 주목해야 한다. 최근 일부 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제도, 조기 퇴근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근무시간 유연화의 확산과 회사 내에 보육시설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좋은 예이다.

유럽의 저출산 국가와는 달리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 등 경제적인 이유는 한국의 초저출산을 가져오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8년 실시된 보육비 및 교육비 부담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현재 보육·교육비 지출 수준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사람은 영유아 보육비 약 70%, 유치원비 약 80%, 초등학교 교육비 약 75%, 중학교 교육비 약 80%, 고등학교 교육비 약 90%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신윤정 외, 2008). 일반적으로 만 5세까지 아이 한 명당 드는 비

용이 월 평균 70만 원이고, 이후 피아노 학원과 영어학원 등 ‘아주 기본적인’ 과외만 시켜도 한 달에 30-70만원은 족히 든다. 이후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이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등록금은 제외해도 사교육비가 문제다. 최소 50만원씩은 학원비로 필요하고 교재비와 교복, 용돈까지 합치면 월 100-130만원이 필요하다. 태어날 때부터 대학 진학할 때까지 약 1억 8,000만원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는 한국의 부모들이 왜 애 낳기를 꺼리는가에 대한 답을 잘 보여준다.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앞에서 제기한 질문들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초저출산 추세는 일시적인 추세가 아니라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혼인연령과 출산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 역시 초저출산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한다. 둘째, 초저출산의 수준에 관한 것으로 앞으로 출산수준이 더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최근 초저출산을 가져온 다양한 요인들이 개선되지 않거나 초저출산 추이를 막기 위한 정책이 미흡하면 현재보다 더 낮은 출산 수준이 나타날 가능성은 높기 때문이다. 셋째, 유럽의 경우와 다르게 한국, 타이완, 홍콩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초저출산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아이를 적게 낳거나 낳지 않는 이유로 한국인은 과중한 사교육비와 보육비 부담, 열악한 육아 여건 등을 들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타이완과 홍콩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자녀의 교육을 특히 중시하는 풍토와 함께 유교주의 가족문화의 영향으로 어머니에 의한 직접적인 자녀 양육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여성은 자녀를 되도록 적게 갖거나 갖지 않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높은 교육비 부담과 육아부담을 줄이는 정책적 고려 없이 출산율이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난망하다는 지적에 주목해야 한다. “어떤 식으로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비정상적인 사교육 경쟁을 줄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저출산 해법”이라는 주장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두섭 (2005) “한국의 제2차 출산력변천과 그 인과구조” 《인구와 사회》 1(1): 23-53.
 _____ (2007) 《한국의 경제위기와 출산력 변화》 집문당.

- _____ (2009) “출산 순위별 출산증가 요인 분석” 《한국인구학》 32(1): 51-70.
- 김승권 외 (2006) 《초저출산 국가의 출산동향과 정책대응에 대한 한·일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혜영 (2008) “신자유주의와 다양한 가족” 《한국사회》 9(2): 55-94.
- 류덕현 (2008) “출산율 및 여성고용 제고 정책이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31(1): 27-54.
- 매일경제 “남성 직업 안정돼야 저출산 해소” 2006년 3월 8일자.
- 박수미 (2008) “둘째 출산 계획의 결정요인과 가족내 성 형평성” 《한국인구학》 31(1): 55-74.
- 신운정·성태윤·최은영 (2008)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보육·교육비 부담 정도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오유진·박성준 (2008) “저출산의 경제학적 분석” 《한국경제학보》 15(1): 93-112.
- 유삼현 (2006) “지역별 차별출산력의 분석: 저출산 인과구조의 이해” 《한국인구학》 28(1): 107-132.
- 이삼식 외 (2008) 《최근 출산율 증가원인 분석 및 중기 출산율 예측》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성용 (2006) “경제위기와 저출산” 《한국인구학》 29(3): 111-138.
- 이희연 (2003) 《인구학》 법문사.
- 정성호 (2009) “저출산에 관한 이론적 접근” 《한국인구학》 32(2): 161-183.
- 정혜은·진미정 (2008) “취업여부에 따른 기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의도” 《한국인구학》 31(1): 151-168.
- 조선일보 “한국의 부모들 왜 애 낳기 꺼리나” 2009년 5월 5일자.
- 통계청 (2009) 한국통계정보시스템(KOSIS), <http://kosis.nso.go.kr>
- 통계개발원 (2009) 《한국의 차별 출산력 분석》.
- 홍춘욱 (2009) 《인구변화가 부의 지도를 바꾼다》 원앤원북스.
- Billari, F. C. and H. P. Kohler (2004) “Patterns of Low and Lowest-Low Fertility in Europe” *Population Studies* 58(2): 161-176.
- Bongaarts, J. (2002) “The End of the Fertility Transition in the Developed World”,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8(3): 419-443.
- Frejka, T. and J. P. Sardon (2004) *Childbearing Trends and Prospects in Low-Fertility Countries Vol. 13*, European Studies of Population, Kluwer

- Academic Publishers, Dordercht, cited from Goldstein (2009).
- Goldstein, J. R., T. Sobotka, and A. Jasilioniene (2009) "The End of 'lowest-low' Fertility?" Paper presented at *2009 PAA Annual Meeting, Detroit*.
- Inglehart, R.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aneko, R., A. Ishikawa, F. Ishii, T. Sasai, M. Iwasawa, F. Mita, and R. Moriizumi (2008) "Population Projections for Japan: 2006-2055. Outline of Results, Methods, and Assumptions" *The Japanese Journal of Population* 6(1): 76-114.
- Kohler, H. P. (2001) *Fertility and Social Interaction: an Economic Perspective*. Oxford University Press.
- Kohler, H. P., F. C. Billari and J. A. Orgega (2002) "The Emergence of Lowest-Low Fertility in Europe during the 1990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8(4): 641-680.
- Lesthaeghe, R. and van de Kaa, D. J. (1986) "Two Demographic Transitions?" In D. J. van de Kaa and R. Lesthaeghe(eds), *Population: Growth and Decline: Van Loghum Slaterus*.
- Lutz, W. (2005) "Low Fertility in Singapore: Causes, Consequences and Policies", Paper presented at *the Forum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in East Asia* Beijing, May 16-17, 2005
- Lutz, W., V. Skirbekk and M. R. Testa (2006) "The Low Fertility Trap Hypothesis: Forces that may lead to Further Postponement and Fewer Births in Europe" *Interim Report, International Institutue for Applied System Analysis*, IR-06-017.
- McDonald, P. (2000) "Gender Equity, Social Institutions and the Future of Fertility", *Journal of Population Research* 17(1): 1-15.

Is Lowest-Low Fertility going to Continue in Korea?

Sungho Chung

Low fertility has become quite commonplace worldwide, and Europe has experienced below replacement fertility for several decades. In addition, lowest-low fertility, defined as period total fertility rate below 1.3, has rapidly spread in Europe during the 1990s and is likely to expand further. After the turn of century, lowest-low fertility started spreading in Eastern Asia. Korea's TFR of 1.19 in 2008 is lower than most European countries, although it is higher than the Hongkong(1.02) and Taiwan(1.09).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socioeconomic determinants of lowest-low fertility in Korea. In doing so, this paper discusses the effects of female labour force participation, labour instability on family formation and fertility. The data includes female 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 unemployment rate, age at first marriage, and total fertility rate from 1980 to 2008. First, the economic recession hindered young people's economic independence and propensity to marry. Married couples were also depressed with uncertainty toward the future and avoided to have children. Second, the growth in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had a negative impact on fertility, under the low level of compatibility between women's work and childrearing. Moreover, this paper argues that the rising cost of children including public and private educational costs is thought to be the main reason of the recent low fertility in Korea. Policy implications and some comments on population policies are also presented in the final section.

Key Words: Female labour force participation, Age at first marriage, Labour instability, Cost of childrearing and education